

러시아 G20 정상회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윤덕룡 국제경제실 국제거시팀 선임연구위원 (dryoon@kiep.go.kr, Tel: 3460-1068)

김수빈 국제경제실 국제거시팀 연구원 (sbkim@kiep.go.kr, Tel: 3460-1228)

차 례 ●●●

1. 러시아 G20 정상회의 개요
2. 주요 의제 및 타결 내용
3. 러시아 G20 정상회의 주요 성과 및 의의
4. G20 정상회의 과제 및 해결방향

주요 내용 ●●●

- ▶ 2013년 9월 5~6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개최된 제8차 G20 정상회의는 '성장 강화 및 고용창출' 을 위해 한층 강화된 G20 차원의 공조를 이끌어냈음.
- 이 정상회의의 11대 의제별 합의사안을 다룬 정상선언문(communique)과 부속서를 발표하고, 고용 중심의 이슈 관리, 액션플랜의 적극적 활용 등을 통해 G20 정상회의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음.
- ▶ 금번 회의의 핵심 성과로는 글로벌 현안에 대한 G20 차원의 해결책 제시와 세계경제 거버넌스(governance)로 서 G20의 지속적인 책임수행 다짐 등이 있음.
- 선진국의 통화정책 정상화는 시장과의 명확한 소통과 신중한 조정과정을 거쳐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각국 은 파급효과 관리에 힘쓸 것에 합의하였음.
- 국제적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을 촉구하며, 관련정보의 공유체제를 도입하기로 하여 정당한 세 원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고용창출이 G20 차원의 최우선 과제인 만큼 모든 의제를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재구성하여 논의를 진행하였 고, 그 결과 고용확대를 위한 구조적 대응의 필요성에 합의하였음.
- G20 출범 후 5년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세계경제의 원활한 운영에 앞장서는 글로벌 거버넌스로서의 의무 를 재확인하였음.
- ▶ 한국은 다양한 의제들에 대해 지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한국이 주도해온 의제가 지속적인 성과를 내도록 적극 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음.
- 출구전략에 대한 신흥국과 선진국의 중재자 역할, 지역금융안전망 역할 강조, 실업 문제 해결의 실질적 방안 제 시 등으로 리더십을 발휘하였음.
- 보호무역조치 동결 연장, 서울 개발원칙 고수 등 한국이 주도해온 의제의 성과 관리에 힘씀.
- ▶ 향후 G20 정상회의에는 시리아 사태와 같은 정치적 이슈에 함몰될 가능성의 방지, 의제과잉 문제에 대한 해결, 국가간 담합 지양 등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한국 역시 주요 의제에 대한 G20 내 협력 네트워크 구축, 대 (對)세계 전략의 수립 및 운용체계 구축, 지적 리더십의 제도화 등의 필요성이 확인됨.

1. 러시아 G20 정상회의 개요

■ 2013년 9월 5~6일 제8차 G20 정상회의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개최

- 상트페테르부르크 정상회의에는 G20 국가 이외에 6개 초청국(스페인, 브루나이, 카자흐스탄, 에티오피아, 세네갈, 싱가포르)과 7개 주요 국제기구(UN, 세계은행, IMF, FSB, OECD, WTO, ILO)의 수장들이 참석하였음.
- 이번 G20 정상회의는 트로이카 체제¹⁾에 따라 멕시코(직전 의장국), 러시아(현재 의장국), 호주(차기 의장국) 3국이 의제 선정, 공동선언문 작성, 실무그룹 활동 등 G20 제반 업무를 진행하였음.

표 1. 러시아 G20 정상회의 참석 국가 및 국제기구

분 류		국 가
회원국	G7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이탈리아
	아시아	한국,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중남미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유럽 · 오세아니아	EU 의장국, 러시아, 터키, 호주
	아프리카	남아프리카공화국
초청국	스페인, 브루나이, 카자흐스탄, 에티오피아, 세네갈, 싱가포르	
국제기구	UN, 세계은행, IMF, FSB, OECD, WTO, ILO	

자료: 필자 정리.

■ 올해 의장국인 러시아는 ‘성장 강화 및 고용창출’ 을 최우선 과제로 상정하고, 3대 기본방향(priorities)과 11대 의제를 선정

- 3대 기본방향 설정은 역대 G20 정상회의 중 처음 시도된 것으로, ‘양질의 고용과 투자를 통한 성장’, ‘효과적인 규제를 통한 성장’, ‘신뢰와 투명성 제고를 통한 성장’으로 설정되었음.
- 러시아는 기존의 G20 의제 외에 고용창출, 장기투자재원 조성, 재정건전화 및 조세 정의 실현, 반부패를 별도의 의제로 부각시킴.

■ 셰르파(Sherpa)²⁾ 트랙과 재무트랙의 분리, 액션플랜(Action Plan) 활용, 전문가 및 실무그룹의 운용 등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 보다 효율적인 논의가 가능

- G20 정상회의 의제가 확대되면서 셰르파의 부담이 과중되었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재정관련 이슈 관리를 분리하여 재무트랙에게 위임하였음.

1) 삼두마차를 의미하는 러시아어로, 논의의 연속성과 일관성 확보를 위해 ‘직전 의장국, 현재 의장국, 차기 의장국’ 3국으로 구성된 체제로 운영
 2) 셰르파(Sherpa)는 G20 정상회의를 준비하는 사전교섭 대표단으로, 각국은 대통령실 경제팀원을 셰르파로 파견

- 주요의제들에 대해서는 각국의 의무사항을 담은 액션플랜을 제시하고, 이행평가를 통한 사후관리를 약속함.
- 장기적 접근이 필요한 이슈들에 대해 전문가그룹(experts group)과 실무그룹(working group)을 운영하고, 각 그룹의 활동과 관련된 보고서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심도있는 논의를 이어감.
- 이러한 일련의 제도 개선으로 G20 정상회의가 ‘말 잔치(talk shop)’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상당 수준 불식시키는 성과를 거둠.

■ 고용 부문과 재정건전화 및 조세 정의 실현 관련 의제에 대한 G20 국가의 공조를 도출한 사실은 이번 러시아 정상회의의 주요 성과

-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재정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가운데 강하고 포용적인 성장과 고용 회복을 목표로 그동안 약화되었던 G20 체제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음.

2. 주요 의제 및 타결 내용

■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G20 공동의 결단력 있는 행동을 약속하는 정상선언문(communique)을 채택하고, G20 5주년 기념 비전 선언문(G20 5th Anniversary Vision Statement)을 부속서에 포함

- 정상선언문은 12개 섹션 114개 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본문은 11대 의제별 성과물³⁾로 구성되어 있음.
- G20 5주년 기념 비전 선언문을 통해 G20 출범 5주년 성과를 평가하고,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잡힌 포용적 성장을 성취하기 위한 국제공조 강화를 결의

표 2. 제8차 G20 정상회의 주요 의제

주요 의제	내용	비고
거시경제정책 공조	-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 달성을 위한 ‘상트페테르부르크 행동계획’ 합의 - 선진국 출구전략에 대한 공조 필요성	기존 의제
일자리 창출	- 청년층 실업, 불안정 고용을 해결하기 위해 공조되고 통합된 공공정책 마련 - 국가별 계획 및 정책 교환 등을 위한 고용·재무장관의 지속적 협력 추구	신규 의제
장기투자재원 조성	- 장기금융 관련 요소에 대한 평가 이행 촉구 - 국내 투자환경의 가시적 향상을 위한 G20 차원 및 국가별 조치 발굴	신규 의제

3) 각 의제별로 정상선언문에 언급된 부속서로는 상트페테르부르크 액션플랜(St.Petersburg Action Plan), 중기재정전략(St.Petersburg Fiscal Templates for Advanced/Emerging Market Economies), MAP(Multi-year Action Plan) 중기정책전략, 이행 성과 평가(The Accountability Assessment), RTAs 투명성 증진을 위한 우리의 접근(Advancing Transparency in Regional Trade Agreements), 조세관련 부속서(Tax Annex to the St.Petersburg G20 Leaders' Declaration) 등이 있음.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g20.org/documents>에서 열람 가능

표 2. 계속

주요 의제	내용	비고
다자무역체제 강화	- 보호주의 조치 지양, 무역 내 투명성 강화 등을 위해 보호주의 동결 서약(standstill) - 지역무역협정(RTAs)과 통합무역정보포털(I-TIP) 지지	기존 의제
재정건전화 및 조세 정의 실현	- OECD의 '역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행동계획' 승인 및 이행 촉구 - OECD의 '글로벌 조세정보 자동교환 모델' 개발 계획 승인	신규 의제
국제금융구조 개혁	- IMF 쿼터와 지배구조 개혁 및 지역금융안전망(RFAs) 강화	기존 의제
금융규제	- 안전하고 신뢰 가능한 금융시스템 구축 및 광범위한 금융개혁에 동의	기존 의제
금융 포용, 금융 교육, 소비자 보호	- 금융 포용을 위한 국제 파트너십을 지지하고 관련 국제기구 협력 강화 촉구	기존 의제
포용적 개발	- '상트페테르부르크 개발전망(St.Petersburg Development Outlook)' 지지 - 새천년개발목표(MDG) 달성 시한인 2015년 이후 개발의제에 대한 합의 촉구	기존 의제
에너지/기후변화 대응	- 에너지 협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 -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성장, 해양환경보호(GMEP) 등 환경보호 관련 협력 강조 - 녹색기후기금(GCF) 운영 개시 지지	기존 의제
반부패	- G20의 부패방지 행동계획의 이행 약속 지속	신규 의제

가. 거시경제정책 공조

■ 본 의제는 세계경제 흐름에 비추어 볼 때 여전히 경기회복은 취약하며 하방위험이 지속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

- 고실업, 신흥국 성장 둔화, 통화정책으로 인한 금융불안 확대 등에 대응하여 G20 차원의 거시경제정책 공조 강화의 필요성을 절감하였음.

■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 경로 진입을 위한 '상트페테르부르크 액션플랜' 제시

- G20 최우선 과제인 '성장 강화 및 고용창출을 위해 국가별 의무 사항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향후 공약에 대한 이행상황을 평가하여 공조의 지속성을 이끌어내는 계기를 마련하였음.
- 재정건전화를 위해 G20 선진국들은 그들의 재정전략의 이행에 있어 유연한 접근을 유지⁴⁾하기로 합의하였음.
- 한편 금융변동성 확대에 직면한 신흥국들은 경제 펀더멘털(fundamental) 제고, 외부충격에 대한 복원력 강화 및 금융시스템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함.

■ 특히 선진국 출구전략에 대한 정책 공조 노력을 촉구하며, 통화정책의 파급효과 관리를 강조

- 선진국 통화정책의 정상화는 경기회복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신중히 조정(carefully calibrated)되고 명확히 소통(communicated)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음.

4) 2016년 이후의 '중기 재정건전화 전략(St.Petersburg Fiscal Templates for Advanced/Emerging Market Economies)'을 마련하고, 차질 없이 이행하기로 합의. 이에 따라 재정건전화 지표(국가채무 비율, 재정수지 적자비율 등)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하되, 단기에는 경기 여건을 감안하여 유연하게 운영하기로 합의

- 통화완화의 장기화로 인한 위험과 의도치 않은 부작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각국은 세계 경제성장과 금융안정에 기여하는 정책을 모색할 뿐 아니라 그 파급효과를 관리할 수 있도록 약속함.

나. 양질의 고용창출

- 일자리 창출을 위해 거시경제 · 고용정책 등을 포괄한 통합적인 접근과 G20 공동의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합의 도출은 이번 정상회의의 주요 성과로 평가

- 실업과 불완전 고용, 특히 청년실업은 세계경제가 당면한 주요 도전과제이자 G20 최우선 과제인 만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은 가장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었음.

- 고용창출 촉진, 맞춤형 일자리 제공 등을 위한 구조개혁을 위해 G20 국가의 공조를 촉구

- 친성장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정부 주도의 기업환경 개선, 노동시장 효율성 제고, 적절한 노동 보호 및 세제 혜택, 교육 프로그램 제공, 목표화 된 투자증진 등을 논의하였음.
- 또한 근로조건 및 임금과 관련된 협상체계를 정비하고, 청년과 대표성이 낮은 취약계층을 위한 구직지원, 기업 차원의 고용촉진 방안, 맞춤형 지원전략 등을 모색하기로 함.
- IMF와 여타 관련된 국제기구들은 성장, 고용, 소득 분배 등의 분야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야 할 것임.

- 고용 · 재무장관 합동회의를 최초로 개최하여 고용과 관련된 사회정책과 거시 및 금융정책의 공조와 통합방안을 모색

- 합동회의를 통해 G20 국가들의 최근 경험을 분석하고 그동안의 성공적인 모범사례를 발굴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이행하기로 함.

- 공약 이행의 진전 보고 및 효과적인 정책과 조치 경험의 공유 차원에서 고용 태스크포스(Task Force)⁵⁾ 위임을 한 해 연장

- 경제·노동·고용정책과 관련된 문제의 탐구, 국가 사회 보호 시스템에 초점을 맞춘 구조적 실업(특히 청년실업) 문제 해결전략 마련을 요청함.
- 위험한 작업환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명·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 ILO와 제휴를 맺고, 작업장 안전성 제고를 위한 G20 차원의 방안을 요청함.

5) 각국의 노동시장 및 고용 관련 도전과제를 다루는 방식을 공유하기 위해 2011년 G20 정부 대표단과 전문가로 구성된 조직

다. 장기투자재원 조성

-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이행방안과 과제별 정책권고안 마련 등 행동지향적(action-oriented) 합의를 도출
 - 이 의제는 지속가능한 성장 및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투자 활성화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의장국인 러시아가 제안한 신규 의제임.
 - 특히 공공재원이 제약된 상황에서 기관투자자, 민관협력사업(Public Private Partnership) 등 민간자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논의기반을 마련하였음.
 -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은 2014년 G20 정상회의까지 국제기구 및 실무그룹(working group)과의 협력 하에 장기투자 재원의 가용성 등을 분석한 결과와 국가별 권고안을 제출해야 함.
 - G20·OECD가 제출한 ‘기관 투자자들의 장기투자 확대를 위한 상위원칙’을 채택하고, FSB의 금융규제 개혁이 장기투자재원 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함.
 - 국내 투자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자본시장 발전 촉진, 인프라 구축 등 생산적 투자로의 중개 활성화, 중소기업의 자금 접근성 개선을 위한 조치 등을 규명한 권고안을 요청함.

라. 다자무역체제의 강화

- 다자무역체제의 성공적인 작동과 적절한 규범의 시행을 위해 보호무역조치 동결(standstill) 서약을 2016년 말까지 연장
 - 무역 및 투자장벽 제거, 새로운 보호무역조치의 원상회복 등에 동참하기로 함.
 - WTO, OECD, UNCTAD의 무역 및 투자 관련 조치에 대한 모니터링 작업의 중요성을 강조함.
 - 도하개발어젠다(DDA)의 성공적인 타결과 2013년 12월 제9차 WTO 각료회의(MC-9)⁶⁾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노력하기로 함.
- 무역 및 투자 자유화에 기여하는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체결 장려
 - WTO의 지속적인 RTAs 관련 작업을 촉구하고, 부속서에 ‘RTAs 투명성 증진을 위한 우리의 접근(Advancing Transparency in Regional Trade Agreements)’을 공유하였음.
 - 아울러 ‘TNT(Transparency in Trade) 이니셔티브⁷⁾’와 ‘통합무역정보포털(I-TIP)⁸⁾’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음.

6) 2013년 12월 무역 원활화, 농업 일부, 개발 등과 관련한 이슈를 다루는 WTO 각료회의로, 발리에서 개최될 예정임.

7) 아프리카 개발은행, 국제무역센터(ITC), UNCTAD, 세계은행의 공동프로젝트

8) 무역기회 발굴 및 흐름 촉진을 위해 무역정책 데이터와 분석 체계를 제공하는 포털

■ OECD · WTO · UNCTAD에 글로벌 가치사슬 관련 정책 권고안을 담은 보고서 발간을 요청

-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s) 참여가 성장, 산업구조, 개발과 고용창출 등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력과 관련된 분석을 지속하여 2014년 상반기 내에 보고서를 발간할 것을 요청하였음.

마. 역외 조세회피 방지

■ 재정건전성과 조세 정의를 저해하는 공격적 조세회피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에 동참할 것을 촉구

- OECD의 ‘역외 조세회피(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⁹⁾ 방지를 위한 액션플랜과 ‘글로벌 조세정보 자동교환 모델’의 개발 계획을 승인하고 차질없는 이행에 합의하였음.

■ 역외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액션플랜¹⁰⁾은 이번 정상회의의 주요 성과 중 하나로, 신규 국제조세규약, 조세의 투명성 증대방안 등을 포함

- 공격적 조세회피를 통한 세원 잠식, 과세관할권 결정기준의 남용, 이전가격제도 남용 등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각국의 조세법 제정 주권을 존중하는 동시에 국제조세규약에 변화를 주고, 투명성을 증대시키는 목적을 지님.
-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OECD의 ‘국경없는 세무조사관 이니셔티브(Tax Inspectors without Borders Initiative)’를 지지하며, 실무그룹은 2014년 정상회의까지 액션플랜 이행 점검 등과 관련한 결과 보고를 해야 함.

■ 조세정보 자동교환을 위한 글로벌 모델의 개발 승인을 통해 2015년 말부터 G20간 조세정보의 자동교환이 가능할 전망

- OECD는 G20 회원국과 협력하여 2014년 2월까지 자동 정보교환을 위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 세부방안을 2014년 중반까지 마련하는 작업을 수행할 것임.
- 나아가 개도국도 조세정보 자동교환의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개도국의 역량강화 지원방안을 모색하기로 함.
- 이외 다자간 조세행정 공조협약 가입을 요청하고, 글로벌 포럼을 통해 정보 자동교환 기준 이행 모니터링 메커니즘을 구축하기로 함.

9) 다국적기업이 저세율 또는 무세율 국가로 소득 이전 등 조세를 회피하는 행위로 인해 세원이 잠식되는 현상

10) 자세한 내용은 부록 2 참고

바. 국제금융체제 개혁

- IMF의 지배구조 개혁의 마무리와,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완화방안으로 지역금융안전망(RFAs: Regional Financial Arrangements)의 역할 강화를 논의
 - 2010년에 합의한 IMF 쿼터 및 지배구조 개혁안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하고 쿼터 공식 및 15차 일반 쿼터 검토를 완료하기로 한 일정(2014년 1월)을 재확인하였음.
 - 쿼터 공식에 따른 쿼터의 배분은 IMF 회원국의 세계경제 내 상대적 비중 변화를 반영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10월 G20 재무장관 회의 및 2014년 IMFC 회의에서 실질적 진전사항을 보고하기로 함.
 - IMF와 RFA 간 협력을 강화하고, 향후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로 하여금 상호협력 발전 및 진전사항을 점검하도록 요청함.
 - 또한 IMF는 세계은행, 국제결제은행(BIS), EBRD(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OECD 등 여타 국제기구와의 협력 이행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약속함.¹¹⁾
- 아프리카개발기금(AfDF 13)과 국제개발연합(IDA 17)의 자원보충에 기여하기로 한 약속을 재확인

사. 금융규제 강화

-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적인 경제 성장을 지원하는 금융체제의 확립
 - 재정의 자주성 확대, 금융규제 정책의 개발 및 이행 조정능력 강화를 목표로 FSB의 지배구조 개선작업을 지시함.
 - 현재 총회 · 운영위원회의 의석수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는 바 FSB 지배구조가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변화된 위상을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음.
 - FSB 지배구조 개선작업 시한을 2014년 ‘G20 정상회의’ 로 명시하고 위 작업 진전사항에 대한 보고 의무를 부여함.
 - FSB, 국제기준정립기구, IMF, 세계은행 그룹은 규제개혁이 신흥·개발도상국 경제에 미치는 의도하지 않은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모니터링 및 분석 작업을 수행해야 함.
 - 글로벌 금융체제의 분절화를 방지하는 방식을 통해 금융개혁 의제를 완전하게 완료할 것이며, 금융규제 개혁이 금융체제의 견고함, 경제성장, 장기투자자원 조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것임.
- 금융기관의 복원력 강화와 대마불사 종결을 위한 금융 관련 국제기구 지원요청
 - 바젤위원회(BCBS), FSB, 국제보험감독협회, 지급결제위원회(CPSS), 국제증권위원회기구(IOSCO) 등 각 기관의 성격에 맞는 지원을 요청함.¹²⁾

11) - IMF와 세계은행: 국가 채무관리 가이드라인 검토 및 개정작업 지속
 - IMF와 BIS: 글로벌 유동성 상황을 반영하는 지표 개발작업 수행 및 지표의 활용방안 모색
 - IMF와 여타 국제기구(EBRD, OECD): 지역통화 채권시장 진단체계 마련

■ 이외에도 투명하고 연속적으로 기능하는 금융시장을 위한 일련의 작업을 요청

- 장외 파생상품시장 개혁, IOSCO의 지표금리 활용, 신용평가사에 대한 의존도 축소, 회계기준 단일화 도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작업을 촉구하였음.
- 이외 그림자금융 리스크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감독 및 규제를 강화하기로 하고,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에 대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의 대응책을 논의함.

자. 포용적 개발 촉진

■ 성장 및 개발격차 축소를 위해 개발의제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도출을 촉구하고 지속적인 이행점검의 중요성을 피력

-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다년간 개발 행동계획(2010 Seoul Multi-Year Action Plan on Development)에 대한 이행 성과 평가보고서와 신규 행동계획을 채택하였음.
 - 2010년 개발의제 이행이 종료됨에 따라 이행 성과 평가보고서를 통해 그간의 활동에 대한 평가작업을 수행하였음.
 - 신규 행동계획은 이행 성과 평가보고서의 제언에 따라 협력분야를 5개¹³⁾로 간소화하고 2014년 정상회의에서 구체적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 주기적인 이행 성과를 평가하기로 함.
- 이는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하는 분야와 G20 개발의제를 명확하게 통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 2000년 이후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¹⁴⁾ 달성시한인 2015년 이후의 개발의제에 대한 합의 촉구가 지역마다 상이한 점을 인식하고, 목표 달성을 가속화하기로 약속

- MDG의 달성 성과가 지역마다 상이한 점을 인식한 후 목표 달성을 가속화하기로 약속하고, Post-2015 개발의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UN의 조력을 지지함.
 - 상이한 국별 현실과 개발수준 고려, 국별 정책과 우선순위 존중, 빈곤해소 및 환경·경제·사회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포괄하는 통합적 개발의제를 요구함.

■ 새로운 질병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세계보건기구의 역할 강조 및 국제보건기준 강화

-
- 12) - 바젤위원회: 자기자본비율 규제와 바젤 III 체제의 나머지 구성요소(국제적으로 조화된 레버리지 비율, 순안정자금조달비율 등)에 대한 제안서 요청
 - FSB: 대마불사의 종결 이행경과와 향후 과제에 대한 보고서를 환영하며, 시스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모든 금융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개혁 수행을 요청
 - 국제보험감독협회: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보험회사(G-SIIs) 리스트의 연간 업데이트를 요청하고, 2014년 G20 정상회의까지 자본규제안 마련을 촉구
 - 지급결제위원회와 국제증권위원회기구: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시장 인프라에 대한 작업 지속

13) 식량안보 및 영양공급, 인프라, 인적자원 개발, 금융소외계층 포용, 국내재원 조성을 포함. 개발 격차를 줄이기 위해 설정한 의제 중 식량안보와 영양공급을 최우선순위로 채택하고, 2011년 채택한 '식량가격 변동과 농업에 대한 행동계획'에 언급된 사항을 포함하여 G20의 모든 공약과 이니셔티브를 이행하기 위한 결의를 재확인

14) 2000년 UN 새천년정상회의에서 채택된 빈곤퇴치와 개발을 위한 주요 목표

차. 기타 의제

- 금융 포용을 위한 국제 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for Financial Inclusion)을 지지하고 향후 호주 의장국 체제하에서도 노력을 지속할 것을 약속
 -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이해력 제고를 위한 GPFi 내 소그룹 신설, 중소기업 금융 지원을 위한 GPFi의 노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음.
 - 효과적인 금융 포용 목표 설정 및 점검 요청, 중소기업 금융제약의 해결방안¹⁵⁾을 모색하도록 촉구하였음.
 - 또한 OECD, INFE(International Network on Financial Education), 세계은행 등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업을 통해 금융 소비자 보호 및 금융 이해력 제고방안을 모색하기로 함.

- 에너지시장 투명성 제고 및 인프라 투자 촉진,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성장 추구를 위한 노력 강화에 합의
 - 민간·공공부문과 국제기구간 협력을 통해 에너지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청정·저탄소에너지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기로 함.
 -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의 운영 개시 지지 및 G20 기후재원 연구그룹의 보고서에 기반을 둔 지속적 연구 수행 등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성장 추구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촉구함.

- 부패척결을 위한 G20 회원국간의 협력 강화 지침 마련 및 반부패(Anti-Corruption) 환경 조성
 -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고위급 원칙’을 승인¹⁶⁾하고, ‘반부패와 경제성장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채택함.
 - 부패 불관용 문화 조성을 위해 부패 개연성이 높은 분야의 부패척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 거래관계 청렴성 제고, 채굴산업 청렴성 이니셔티브(Extractive Industries Transparency Initiative) 자발 참여를 요청함.
 - 반부패 교육프로그램 시행과 G20 반부패 실무그룹¹⁷⁾·B20·C20 간 소통 노력을 확대하고, UN반부패협약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음.
 - 또한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TF)의 반부패 분야 활동을 지지하며 협력 증진을 약속함.

15) 우수 중소기업 지원사업 선정(SME Finance Challenge), 개도국 중소기업 지원전략 수립 지원(SME Finance Compact) 등

16) 이 원칙은 부패범죄 수사 및 기소, 부패자산 회복을 목적으로 승인되었음.

17) G20 반부패 실무그룹의 활동지침 및 행동계획의 근거로 ‘상트페테르부르크 전략체제’를 승인

3. 러시아 G20 정상회의의 주요 성과 및 의의

가. G20 차원의 성과 및 의의

- 세계경제 거버넌스로서 G20의 역할에 대한 지난 5년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에도 세계경제를 책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것임을 공식적으로 선언
 -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내부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노출되고, 특히 기존의 G7 국가들과 브릭스 국가들 간의 경합구도 형성 등으로 인해 G20의 글로벌 리더십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되어 왔음.
 - G20 정상들은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위기 극복과정에서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고, 향후에도 세계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하여 세계경제의 안정성 제고에 이바지할 것을 공식화하였음.
 - 이는 그동안의 회의론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고 세계경제의 프리미어 포럼으로서 G20의 역할을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출구전략 시행과 관련하여 신중한 통화정책 정상화를 약속하는 합의 도출로 G20 차원의 국제공조 성과를 재시현
 - 미국은 세계경제의 정상화 차원에서 출구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주요 선진국들도 이에 동조하는 반면, 브릭스 국가들은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가중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함.¹⁸⁾
 -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선진국의 통화정책 정상화는 경기회복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그 파급효과(spillover effect)가 막대한 만큼 명확한 소통과 신중한 조정을 거쳐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선진국 통화정책을 포함한 각국의 정책이 세계경제 성장과 금융안정에 기여하도록 파급영향을 관리하자는 데 합의하였음.

- 모든 의제를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재구성함으로써 특정 주제에 집중하여 기여할 수 있는 방식을 새로이 도입하여 이 회의의 효율성 제고
 - G20 정상회의의 의제가 다양해지면서 회의 자체의 집중력이 분산되고 회의의 효율성이 저하되었다는 비판을 받아왔음.
 - 이에 2013년 회의에서 러시아는 모든 의제를 일자리 창출에 연계함으로써 일자리 제고를 위한 G20의 협력에 집중할 수 있는 논의의 틀을 제공함.
 - 일자리 창출에 대한 각 분야의 이슈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력 가능성에 논의의 우선순위를 부여함.

18) 브릭스 국가들은 본 정상회의에 앞선 회동을 통해 1,000억 달러 규모의 외환 풀(pool)을 운영하기로 합의함. 이 기금은 지난해 남아공 회동에서 '원칙적'으로 합의한 바에 따라 세계 최대 외환보유국인 중국의 410억 달러, 브라질, 러시아, 인도 각각 180억 달러, 남아공의 50억 달러로 구성될 것임.

- 이로써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방향의 지평을 확대하고, 특정주제를 중심으로 협력하는 회의의 운영 가능성을 제시하였음.

■ 국제적 조세회피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및 공조체제의 마련은 공정한 조세체계 확립 및 세계 모든 국가들의 정당한 세원확보에 기여할 전망

- 그동안 국제적으로 묵인되어 온 역외 조세회피에 대하여 국제공조를 통해 제약을 가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보공유체제를 도입한 것은 G20의 성격에 부합하는 좋은 성과로 평가됨.

나. 한국 차원의 성과 및 의의

■ 미국의 출구전략에 대한 선진국-신흥국 간 인식 및 입장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가운데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며 중재자 역할을 수행

- 선진국들에게 신흥국 금융시장 및 거시경제적 안정성에 대한 자국 통화정책의 부정적 영향을 감안하여 신중한 통화정책을 시행할 것을 촉구하였음.
- 신흥국은 출구전략 논의에 따른 자본이동의 확대로 급속한 자본 유출입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국가 차원의 구조개혁과 외부충격에 대한 완충장치 강화가 필요함을 강조하였음.
- 이렇게 글로벌 금융안정을 위한 국제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통화당국간 협력증진을 당부한 결과, 선진국과 신흥국 간 합의 도출에 기여했다고 평가받음.

■ 러시아 G20 정상회의의 공통 도전과제인 실업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지적 리더십을 발휘

- 한국은 고용관련 선도발언을 통해 현재 세계적인 고용부족의 문제가 단순한 경기적 문제가 아니라 양극화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여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음.
- 한국이 제시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조조정 접근방식은 G20 회원국의 지지를 이끌어냈고, 향후 IMF 등의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개선책을 도출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함.
 - 일자리 창출과 포용적 성장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으로 고용효과가 큰 중소기업의 창업 및 비즈니스 지원, 생산성 향상을 위한 혁신(innovation) 지원정책 등을 제시하였음.
 -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시장원칙에 입각한 경제 시스템을 운영하되, 양극화의 감축 등 사회적 통합의 필요성을 제시하여 성장의 구조적 환경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음.

■ 글로벌 금융위기와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증대 등에 대비한 지역금융안전망(RFAs)의 역할 확대를 강조하기 위해 IMF 등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 필요성을 인정하고, 협력 확대에 합의

- 지역금융안전망(RFAs)의 역할 강화를 통해 금융시장의 제2차 안전조치기능 장착 필요성은 이미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금융안전망 확충의 일환으로 한국이 제안한 내용임.¹⁹⁾

- 한국은 금융위기 예방 및 대응뿐 아니라 각국의 금융시장 위기관리능력 제고를 위해서 지역 차원의 금융안전망을 통한 지역금융 협력의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여, RFA의 역할에 유보적이던 일부 선진국을 설득하여 공동 선언문에 반영하는 성과를 거둠.
- 또한 RFA에 관한 진전사항을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이행·점검하도록 요청하였으며, IMF-RFA 및 RFA 간 대화채널 구축에 대한 정상들의 공감을 도출하였음.

■ 이외에도 한국이 주도해온 의제들이 지속적인 성과를 내도록 관리하는 데 있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

- IMF 재원확충(38개국 4,610억 달러) 이행이 거의 완료된 가운데²⁰⁾ G20 신뢰성 확보를 위해 차질없이 이행하는 각국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하였음.
-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에 도입된 개발의제의 이행 성과를 평가하고 서울 개발원칙²¹⁾을 고수함으로써, 개발 논의의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음.
- 한국은 '중소기업 소그룹 공동의장국'으로 중소기업 역할의 중요성과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금융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한 결과, 정상선언문에 중소기업 금융관련 문구를 반영하는 성과를 이룸.
- 한국이 유치한 녹색기후기금에 대한 G20 차원의 지지를 이끌어냄으로써 원활한 출범과 운영을 뒷받침하고, 향후 업무방향을 설정할 수 있었음.

4. G20 정상회의의 과제 및 해결방향

가. G20 정상회의의 과제

■ 정치적인 이슈에 함몰될 가능성 차단

- 러시아 G20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은 시리아의 화학가스 사용에 대한 징계의 필요성과 미국의 폭격 움직임 등 시리아 문제에 대하여 심각한 논의를 진행하였고, 공동성명서(Joint Statement on Syria)²²⁾를 함께 발표하여

19) RFAs의 취지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글로벌 금융안전망으로서의 한계점을 보완하는 것임. 즉 IMF의 구제금융을 받을 경우 해당국 경제의 평판이나 신인도에 심각한 부작용을 미치는 '낙인효과'가 있고, 위기의 원인이나 극복방법에 대한 지역별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RFAs가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임.

20) 2013년 현재 4,360억 달러의 양자차입협정이 체결·발효되었으며, 나머지 금액에 대한 차입협정도 곧 발효될 예정임. 우리 정부는 8번째 규모인 150억 달러의 재원마련 의무를 수행하였고, 글로벌 위기대응체제 강화를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적극 참여했음을 인정받음.

21) 한국은 2010년 서울 정상회의에서 개발 이니셔티브를 주도한 국가로 서울 개발원칙을 마련. 서울개발 원칙으로 경제성장 중심, 글로벌 개발 파트너십, 세계·지역 차원의 구조적 문제에 집중, 민간부문의 참여 활성화, 기존 개발노력과의 보완성, 성과 지향을 상징했음.

22) <http://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2013/09/06/joint-statement-syria>에서 열람 가능

관련된 입장을 공식적으로 천명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음.

- 향후에도 주요 정치적 사안에 대하여 글로벌 리더들이 일정수준 이슈화하려는 움직임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경제 관련 프리미어 포럼의 성격이 변화될 가능성도 존재함.

■ 특정 의제에 대한 일몰제 도입, 우선순위에 따른 논의 등 의제과잉에 대한 해결책 필요

- G20 정상회의의 의제는 크게 논의가 더 필요한 기존 의제와 의장국 주도로 제시되는 신규 의제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당해 연도에 확실히 마무리될 수 있는 의제들이 거의 없어 적어도 2~3년 더 논의를 이어갈 필요가 있음.
- 그 결과 의제가 지나치게 많아지는 경향을 보이게 되며, 의제 과잉으로 국제협력의 집중력이 떨어지고 비효율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 G20 국가간 담합으로 인한 전체적인 협력역량 약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 대비

- 이미 G20 출범 시부터 나타났던 우려로, 기존의 G7이 논의를 주도하거나 브릭스 국가들과 지나치게 경합하여 협력의 가능성을 저하시키는 등의 문제가 야기됨.
- 특히 정치적인 문제와 연관될 경우 소위 ‘편가르기’ 형 대립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 글로벌 거버넌스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담당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 모색이 필요함.

나. 한국의 과제

■ 한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주요 의제에 대한 G20 내 협력 네트워크 구축

- 한국은 2012년 기준 세계 GDP 순위가 15위인 국가로, G20 내에서 경제적·정치적 영향력이 낮은 국가일 뿐 아니라 EU와 같은 지역협력이나 G7과 같은 다자협력체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아 영향력이 제한됨.
- G20 내에서 다루어지는 의제의 다양성 때문에 국가간 협력은 상당히 제한성을 가지고 있지만, 일정한 범주 내에서 지속적인 협력이 가능한 네트워크의 존재는 중요한 레버리지로 작용할 수 있음.

■ 세계적 차원에서 한국의 전략을 수립하고 운영하는 추진체계의 구축이 필요

- 한국은 ‘G20’이라는 글로벌 거버넌스에 참여하고 있지만, 아직 세계전략을 구상하고 시행한 경험이 없어서 G20의 체계적인 활용전략이나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체계가 구성되어 있지 않음.
- 교역이 GDP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답게 세계전략을 수립하고, 전략 수립의 일환으로 G20을 활용하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함.

■ 지적 리더십의 유지를 위해 제도화를 통한 안정적 리더십 확보

- 한국은 G20에서 다루어지는 주요 의제들에 대하여 관련부처 담당공무원들을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특히 기획재정부와 외교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세르파 사무국 중심의 G20 회의가 준비되고 있음.
- 세르파 사무국이 대통령실에서 독립한 이후 준비과정의 체계화가 필요한 실정이므로, 국제사회에서 지적 리더십을 통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하기 위해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의 조속한 확충이 요구됨. **KIEP**

부록 1. 역대 G20 정상회의 주요 의제

장소 및 일시	주요 의제
미국(워싱턴) 2008년 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개 항 및 47개 행동계획(Action Plan)으로 구성된 정상선언문 채택 - 국제 금융위기의 원인과 그간의 조치에 대한 평가 - 금융위기 해소를 위한 정책 공조방안 - 국제 금융체제 개편방향 - 자유무역, 시장경제 기본원칙 재확인
영국(런던) 2009년 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9개 항의 정상선언문 및 2개의 부속서 채택 - 확장적 재정·통화 정책 등 거시경제정책 공조방안 - 보호주의 저지 - 금융규제 및 국제협력 강화 - 국제금융기구 개혁
미국(피츠버그) 2009년 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1개 항의 서문, 8개 주제와 50개 항의 본문, 2개 부속서의 정상선언문 채택 - G20 회의 정례화 개최 합의 - 출구전략 공조 확인 - 국제금융기구 쿼터 개혁 추진 - 지속가능한 성장체계 구축을 위한 협력 - 금융규제 개혁 및 감독방안 마련 협의
캐나다(토론토) 2010년 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개 항의 서문, 5개 주제와 43개 항의 본문, 3개 부속서의 정상선언문 채택 -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협력체계 공조 합의 - 금융부문 개혁 및 규제 강화 - 국제 금융기구 쿼터 이전 및 개혁 추진 - 보호주의 저지 및 무역·투자 증진 협력 - 저개발국 지원방안 마련 협의 * 재정적자를 2013년까지 50% 감축하기로 합의
대한민국(서울) 2010년 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개 항의 정상선언문, 74개 항의 합의문, 3개의 부속서에 대해 합의 -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협력(서울 액션플랜) - 국제금융기구(IMF 쿼터 이전 등) 개혁 추진 - 금융부문 개혁 및 감독 강화방안 협의(바젤 III, SIFIs 등) - 글로벌 금융안전망 - 저개발국 지원(서울 개발 컨센서스) - 보호무역 저지를 위한 협력 강화
프랑스(칸) 2011년 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개 항의 합의문, 95개 항의 선언문, 액션플랜 발표 - 거시경제 공조 관련 단기적인 신뢰 회복과 성장지원을 위한 각국별 정책 명시 - 구조조정 등 중장기적 성장기반 강화를 위한 개혁과제 합의 - 2013년까지 보호무역조치 동결 및 신규 무역제한 조치 원상회복 - 국제경제협력의 최상위 포럼으로서 G20의 독보적(unique) 지위 확인 - 대형금융기관(SIFIs) 종합규제체계 마련 - 금융안전위원회(FSB)에 대한 법인격 부여 및 기능 강화 - 농업, 에너지, 고용, 반부패 등 분야별 실무그룹 및 장관회의 결과 승인
멕시코(로스카보스) 2012년 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개 섹션 85개 항의 정상선언문과 액션플랜을 채택한 부속서에 대해 합의 - 세계경제 안정과 회복을 위한 각국 거시경제 정책과제 제시 - 보호무역조치 동결 및 다자무역체제 강화 - 국제금융체제 강화 - 금융개혁 및 금융 소외계층 포용 - 식량안보 및 원자재가격 변동성 대응 - 노동시장 개혁,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개선 - 멕시코 주도 의제: 다자개발은행(MDB) 행동계획 지지 및 포용적 녹색성장

자료: 필자 정리.

부록 2. 역외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액션플랜

액션	주요 내용
디지털 경제의 조세 과제에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디지털 프레젠스(digital presence)의 심화에 대한 보완책 필요 - 디지털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지역 관련 데이터의 생성,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분석 필요 - 직간접 과세를 모두 고려한 과세권 배분, 소득 구분, 원천지과세 범위 등에 대한 논의 필요
혼성 비대칭(Hybrid Mismatch) 상품, 실체 등을 이용한 조세회피에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중 비과세, 이중 감면, 장기 조세유예 등의 해결 촉구 - 국가간 공격적 조세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조세조약 개정 및 국내법 표준안 마련
피지배외국법인제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지배외국법인 규약 설계와 관련한 권고사항 개발
이자 공제 등으로 인한 세원 잠식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 이자 성격의 금융결제를 악용해 발생하는 세원 잠식을 방지하기 위한 규약 설계에 대한 권고사항 개발
투명성과 자산을 고려한 OECD의 유해 조세제도 심사의 효과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원 잠식과 소득 이전 맥락의 조세 우대조치 체제 검토 - 비회원국의 유해조세포럼 참여 권고
조약 남용(Treaty Abuse) 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약을 이용해 부적절한 세금혜택이 허용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국내법 및 조세조약 표준안 마련
고정사업장 구성의 인위적 회피 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정사업장 상태의 인위적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고정사업장의 정의를 변경
무형자산(Intangibles)과 관련된 이전가격에 대한 가이드라인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형자산에 대한 명확한 개념도입이 필요하며 무형자산의 이동 관련 BEPS를 방지하는 규약 개발 - 무형자산의 이용 및 이동과 관련된 소득이 가치창출과 분리되지 않고 부합되어 적절히 할당되도록 조치
리스크와 자본(Risks and Capital) 이전을 통한 소득이전 방지규정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과세국 소재 계열사에 사업상의 위험을 이전하거나 과도한 자본을 배정하여 소득을 이전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 개발
기타 고위험 거래에 대한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삼자 간 발생하지 않을, 또는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래를 통한 소득 이전, 조세회피 등을 방지하기 위한 규약 개발
BEPS에 대한 데이터 수집과 분석, BEPS에 대한 대응을 위한 방법론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EPS의 규모와 경제적 영향을 나타내는 지표와 관련한 권고사항 개발 - BEPS에 대응하기 위한 액션의 효율성과 경제적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여 그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납세자 자기정보 보고 의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격적 또는 남용 거래에 대한 의무공개제도의 설계에 관련한 권고사항 개발
이전가격설정 문서 작성 및 제출에 대한 표준모델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 결정 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하는 규약 개발 - 각국이 요청하는 이전가격 관련 문서의 일관성을 높여 납세협력비용 축소
국제적 조세분쟁 해결 메커니즘의 효율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조세상의 국가간 분쟁해소 절차인 상호합의(Mutual Agreement Procedure)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상호합의 활성화, 중재(Arbitration) 제도 도입 확산 등의 대안 마련
다자간 방편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자간 방편과 관련된 조세법과 국제공법 이슈 분석

자료: 필자 정리.